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경제·안보 등 발전방향 제시

文 대통령, 스페인 국민방문

인더스트리 4.0·스타트업 MOU
건설산업 ‘제3국 공동진출’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스페인에 국민 방문 가운데 ▲산업기술·혁신 분야 ▲스타트업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 경제와 함께 보건협력 등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이하 현지시간)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 회담에서 ▲양자 관계 발전 방안 ▲경제·문화 등 실질 협력 증진 ▲한반도 등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회담 결과, 문 대통령과 산체스 총리는 양국이 1950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가 발전한 점에 대해 평가하며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어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미래 지향적 협력 강화



스페인을 국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W호텔에서 열린 경제인협회 연례포럼 및 개막찬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뉴스1

에 대한 비전과 의지를 담은 ‘한-스페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정무 및 외교 ▲국제 및 다자 협력 ▲세계평화와 안보 ▲경제 협력 ▲과학·기술·혁신 ▲문화·교육·스포츠·인적교류·관광 등 6개 분야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스페인은

인더스트리 4.0 협력·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한-스페인 건설 산업은 ‘제3국 공동진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경제 협력에 따른 세관 상호지원 협정도 체결했다.

인더스트리 4.0 협력 MOU는 4차 산업혁명 분야 양국 간 정책·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분야 부가가치 창출,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정책·기술 공유 ▲고위급회의·세미나 개최 등이

포함돼 있다.

스타트업 협력 MOU는 ▲양국 혁신 스타트업 정책 등 정보 교환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 장려 ▲관련 전문가·공무원 상호 방문 ▲신기술 도입을 위한 기관-기업 간 교류 증진 등을 골자로 한다.

양 정상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한-스페인 청정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양국은 태양광·해상풍력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산업·연구 협력을 증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과 스페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양국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필수적 교류 보장, 보건조치 사전 통보, 기술협력·지원, 자국민 보호 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한-스페인 보건협력협정’도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같은 날 오후 펠리페 6세 국왕 초청으로 바르셀로나 경제인

협회 연례포럼(RCE)에 참석, 스페인 정·재계 인사들과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례포럼은 스페인 내 가장 권위 있는 경제 행사 가운데 하나로 올해 ‘대재건 - 기업, 경제, 정치에서의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은 연례포럼 만찬 연설에서 코로나19와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 2050 탄소중립 비전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우리는 오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됐다. 양국 경제인들도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돼 글로벌 경제를 함께 주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디지털과 그린 분야뿐 아니라 건설·인프라, 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국 경제인들이 손을 잡고 세계로 뻗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7일 한-스페인 관광산업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양국 간 교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스페인 일정을 마무리한 뒤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기업 9곳 저공해차 보급목표 초과달성

작년 저공해차 32.8만대 판매
르노삼성만 판매량 5% 줄어

지난해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 보급 목표 대상 기업 대부분이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 전체 저공해차 보급의 72%(23만7000대)를 차지했다. 다만, 르노삼성은 신규차량 출시 지연과 판매 부진 등으로 저공해차 판매량이 5% 줄어 유일하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10곳이 판매한 저공해차는 총 32만8000여대다. 지난해 보급목표는 2016~2018년 연평균 판매량의 15%인 22만4074대였지만 조사 결과 22% 수준으로 7%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자동차 기업

들을 대상으로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채우지 못하면 기여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저공해차 보급실적이 판정 기준이 된다. 대상 기업은 현대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벤츠, BMW, 토요다, 아우디폭스바겐, 혼다 등 10개사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다 지난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저공해차에는 전기·수소차 외에도 하이브리드차와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 등이 해당된다. 전기·수소차는 1종, 하이브리드차는 2종, 저공해 기준을 충족한 LPG차와 휘발유차가 3종이다.

지난해 10개사가 판매한 저공해차는 1종 6만7000대(4.5%), 2종 11만4000대(7.6%), 3종 14만8000대(9.9%)였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수 장비 전용부품, 출고·통관 5일 단축

국표원, 반도체 안전인증대상 제외

앞으로는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 확인 절차가 없어져 출고·통관이 지금보다 5일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중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규정된 산업용 및 기타 특수한 용도 제품으로 분류돼, 한국제품안전관리위원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작년 기준 이 같은 사유로 안전인

증을 면제받은 전기용품은 총 3961건이며, 그중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1269건으로 전체의 약 3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하지만 현재 납품 건별로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을 접수해야 하고, 면제 확인을 받는 데 최대 5일이 소요돼, 잦은 행정업무 등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소량, 다품종 수요가 대부분이고 연중 24시간 가동하는 반도체 라인 특성상 긴급 수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도체 장비 부품기업 A사의 경우 지난해 총 448건의 인증면제를 신청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당정 ‘맹폭’... 김기현 “덧셈 정치 펼칠 것”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부·여당에 어려워진 경제 지적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에 “처절한 미생 현실을 누가 만들었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단 하나의 방법은 자기 눈을 가리는 것뿐”이라며 “눈을 가린 부끄러운 손을 내리고 눈 앞에 펼쳐진 고통 가득한 진짜 세상을 바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여당의 정책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꼴찌, 노인빈곤율은 압도적 1위, 자살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 청년실업률은 현재 10%대를 기록 중이며 청년체감실업률은 27%에 육박한다. 민주화를 성취한 세계 11위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은 점점 힘겨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침체는 코로나 탓’, ‘집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값 상승은 투기꾼 탓’, ‘백신이 늦어진 이유는 다른 나라 탓’, ‘습관처럼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 ‘안 되면 전부 야당 탓’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연간 일자리 증가수는 박근혜 정부의 22% 수준, 역대 집값 상승률 1위는 노무현 정부, 역대 집값 상승액 1위는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부과 기준

및 LTV·DTI 대출 기준 상향 조정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 도입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 적극 육성 ▲귀족노조 갑질 제동 및 노동개혁 ▲탈원전 정책 폐기 ▲코로나19 백신 지원·보상 국가 책임제 도입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을 약속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남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야말로 진짜 ‘꼰대’, 낡은 이념과 세계관을 30년 넘게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진짜 ‘수구’, 한 때의 운동권 경력으로 평생을 우려 먹고 세습까지 하려는 것이야말로 진짜 ‘기득권’”이라며 “국민의힘은 다른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의 지지를 더하는 덧셈의 정치, ‘가세지계(加勢計)’를 펼칠 것이다. 국민의힘은 능력으로 현실을 바꾸고 비전으로 미래를 대비하며 결과에 책임지겠다”며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손실보상이든 재난지원이든 ‘소급’

권철승 중소기업장관, 정부입장 확인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소급 적용’이 제외된 손실보상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는 데 대해 “소급하는 것은 같다”며 “손실보상으로 할지, 재난 지원 방식으로 할지 의견 차이”라고 말했다. 기존 정부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권철승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상공인·자영

업자 등에 대한 피해) 지원금 성격은 (기본적으로) 소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소급 적용’해 지원하는 방식은 꺼렸다.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면 대상이 제한되고 피해액 추계 처리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권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업체별로 소상공인별로 개인적

으로 편차가 굉장히 크다. 국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식(소급 적용)의 방식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건지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이고 정부 입장도 그렇다”고 말했다.

특히 권 장관은 야당이 주장하는 ‘소급 적용’ 방식에 대해 “대상이 극히 일부에 제한된다”며 “1년 이상 끌어온 재난 상황에 대해 손실 보상 방식을 소급 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전혀 현실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정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최영훈 기자·강준혁 수습기자